

“50년 내다보는 국가 R&D 정책 제대로 만들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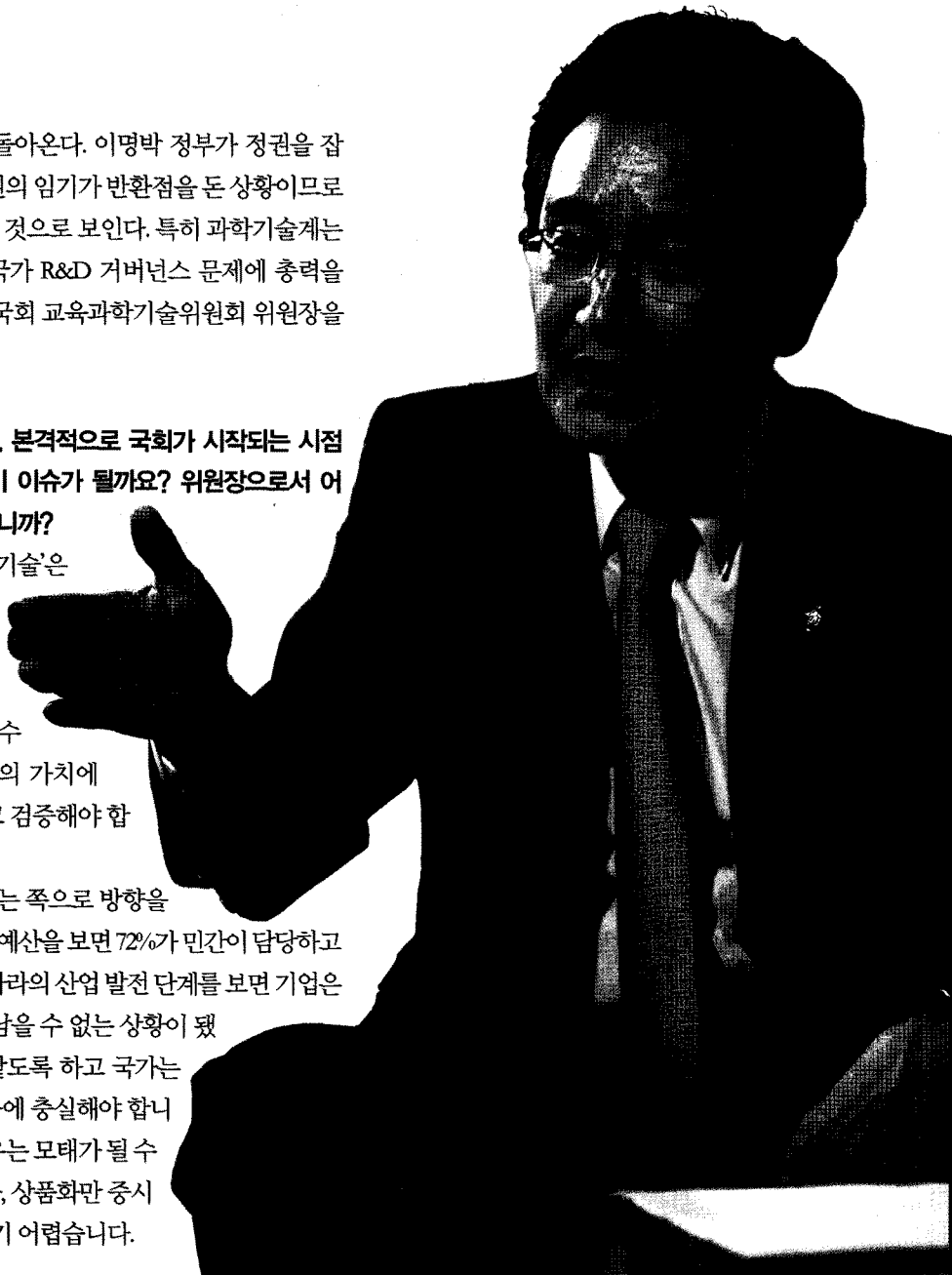
글 이은정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10월이면 또다시 ‘국감’의 계절이 돌아온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은 지 2년 반이 지난 시점, 현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상황이므로 여느 때보다 치열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기술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강화’를 통한 국가 R&D 거버넌스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변재일 의원(민주당)을 만나봤다.

○○ 먼저 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번 교과위에서 주로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될까요? 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다른 부처와 비교해볼 때 ‘교육’과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이나 경제 분야는 현재를 다루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그려나가는 부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국정 감사에서도 현재의 가치에 너무 몰입되지 말고 미래의 비전을 갖고 검증해야 합니다.

과학 분야는 역시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을 보면 72%가 민간이 담당하고 28%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단계를 보면 기업은 스스로가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응용연구는 기업이 맡도록 하고 국가는 기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기초 과학 연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술이 다시 기업을 살찌우는 모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정부가 단기 산업화, 상품화만 중시한다면 제대로 국가의 미래를 펼쳐나가기 어렵습니다.



○○○ 교육 분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육 분야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관심이 있고 저마다 한 마디씩 얘기하는 분야죠. 아무래도 교육과 과학기술이 함께 있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 부문에 너무 치중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립학교법이나 전교조 부분 같은 게 있었는데요. 사실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를 보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교육 정책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창의력, 인재 양성을 강조했는데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다만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균등한 기회 보장, 현 정부는 효율과 경쟁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2년간은 정권 초창기였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는 부분이 많았죠. 하지만 그동안 뭘, 싸울 만큼 싸웠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당은 차기 집권을 위해, 야당은 새 정권 창출을 위해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도 당을 떠나 함께 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또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 현재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해 국가 연구 개발을 총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비교적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왜 모든 부처가 R&D를 하게 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우리는 규제 완화, 작은 정부를 지향해왔습니다. 정부 스스로 규제 완화를 외치다 보니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됐고, 대신 복지, 산업 분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WTO 규정에는 정부가 산업 부문을 지원하는 게 금지되어있고 허용되는 것이 바로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이렇다보니 R&D 예산이 늘어나고 모든 부처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각자 일을 진행하고, 그것을 정권 임기 내에 결과물



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단기 상용화, 단기 산업화 과제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혁파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부총리 부서로 만들었는데 현 정권 들어서 과기부를 없애는 바람에 R&D를 재분배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모든 부처가 스스로 목적성, 방향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국가의 R&D 전략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1980년대는 국산화가 목표였고 1990년대에는 외국의 과학기술을 따라잡는 게 목표였지만 2000년대에는 이제 우리 스스로 새로운 분야를 창조해나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기초 연구, 원천기술에 충실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에서는 '과녁이 없는 화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방향만 보고 화살을 쏘 다음에 그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행정 부처로 만들고 강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시는 거죠? 과학기술부를 없앤 것이 큰 패착이었

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국과위를 통해 R&D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다만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법인 단일화는 다시 바라봐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력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연 연구기관을 또 다시 부처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R&D 거버넌스 문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합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침 지경위 위원장이 전직 과기부 장관을 하셨던 김영환 의원이라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 상임위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는 국가 R&D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국과위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까요? 계속 강조하지만 기초과학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R&D 배분이



기초 과학연구에 집중돼야 합니다. 현재 기초연구와 관련한 학과는 거의 꺾멸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공학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기초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이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도 수학을 기반으로 한 작업이 필요한데 수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서 개발이 어렵다는 거죠. 수학, 화학, 물리학과 같은 기초 이과 학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 단계를 보면 과거에는 반도체 작동원리를 잘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전자공학과 전공자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반도체 재료를 찾아내고 개발해야 하므로 재료공학과, 물리학, 화학 분야가 함께 발전해줘야 됩니다. 이 때문에 당장 시장성은 약하더라도 미래에 필요한 분야를 찾아서 국가가 그 빈자리를 메워줘야 하죠. 특히 국립대학교의 경우 국가가 이과 학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이과도 물론 지원해야겠지만 인문학 분야의 공동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인문학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가치관, 목적의식을 갖게 해주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공계 학문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이

러한 연구들이 모여야 사회 구성원의 생각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진보적인 학문은 무조건 반체제로 몰아붙이면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담론이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인문학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발전해줘야 하는 분야입니다. 컴퓨터를 통해 많은 '다중자아'들이 실현되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인문학적 기반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철학 등을 아우르는 획기적인 발전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IT분야의 정책 입안을 많이 하셨고 정통부 차관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IT 기술 발전을 위해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네. 1998년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 기획실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초고속 인터넷망(ADSL)과 국민 PC 보급을 주도했는데요. 당시 정통부와 통신사업자가 함께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결정했죠. 시장 원리에 따르면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따져 통신비를 책정해야 하겠지만 당시에 그렇게 따져보니 너무 비싸서 인터넷을 사용할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원가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 소득을 봐서 낼 수 있는 요금을 생각하고 종량제(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무는 제도)를 하지 않고 정액제를 실시하기로 먼저 결정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300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월 3만5천 원의 정액요금으로 수익구조를 맞출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부 인터넷 교육을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숙제를 발굴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렇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서비스적인 부분, 즉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식경제부가 맡게 됐습니다. 지금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부의 규제만 있고 R&D 지원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가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아이폰 충격'입니다. 과거에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어간 대한민국이 그 트렌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스마트폰 경쟁에서 아이폰을 따라가느라 허덕이는 수준이 됐습니다. 과거에 인터넷 정액제가 인터넷 확산을 가져왔듯이 이제는 무선망 또한 정액제로 풀고 누구나 자유롭게 무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선망 광대역 사업자를 만들고 통신 서비스업체

가 플랫폼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은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갈아탈 것이냐는 문제를 산업발전 전략을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여성과학자를 위해 어떤 정책을 제안하실 겁니까?** 여성과학자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집에서 야단을 맞습니다(변재일 의원은 전길자 여성과학기술인총연합회 회장의 남편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시험을 치면 여성들이 훨씬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강력한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가끔 남자들로부터 역차별 아니냐는 항의도 받는데 사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왔으니 그것을 만회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해줍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에 남녀 비율이 같을 정도로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여성 인력이 가정에 사장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대학 교수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여

성 인력에 대한 강제 할당비율을 정해줘야 하고, 시행 초기에는 적절한 대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꾸준히 실시해야 시간이 가면서 여성 인력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과학자들의 출산과 보육 문제도 함께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동안 출산과 육아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 현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피부로 못 느끼지만 앞으로 멀지않아 '저출산'으로 피해가 생길 것이므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파행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면 수권 정당으로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만 한다는 이미지를 줘서는 곤란합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적 동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며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도 정책 수립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과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T**

